

원유 생산량 감소 내년 원유 대란 전망

올 하반기에 들어 심화된 원유부족현상이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낙농진흥회 통계에 따르면 2010년 4분기 원유생산량은 전년대비 2.5% 감소한 50만 7000톤으로 생산량이 줄어 유제품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2년 정부의 원유감산대책에 따른 잉여원유차등가격제, 쿼터제 실시 이후 지속적인 생산량 감소 및 토지가 상승, 환경비용부담 등의 증가로 낙농가가 크게 감소하는 한편 낙농업 신규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지속적인 원유감소 추세를 보였다.

이와 함께 올해 초 구제역 발생, 이상기후, 생산비 증가로 젖소 사육두수의 급감 및 폐업농가 속출로 원유생산량은 감소하는 반면 유업체의 가격인하의 영향으로 소비량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원유수급조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이유로 지난 여름 일부 유업체에서 우유의 가정배달이 일시 중단되는 현상도 발생, 장기화될 경우 내년 우유 급식 중단상태 등의 사회적 문제로 발전될 가능성을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또한 올 하반기 들어서는 낙농진흥회가 유업체에 판매했던 용도별 물량이 줄어 유업체들이 피자치즈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어 국내산 피자치즈 생산이 중단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일부 유업체에서는 생산독려를 위한 생산대책 마련을 해 원유부족현상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이 같은 대책은 일개 유업체의 임시방편으로 원유부족현상을 해결할 수는 없다.

원유부족현상이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한지태 낙농육우협회 차장은 "협회는 국회와 정부에 기반유지를 위한 연간총량제 도입 등 목장경영 안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의식을 갖고 현장의견을 반영한 원유 증산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업체 과징금 부과 "농가에 피해전가 우려"

공정거래위원회가 유업체들에게 무려 188억의 과징금 부과한 것과 관련 낙농산업의 특수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최근 낙농업계가 처한 현실을 감안하면 188억원의 과징금은 감내하기 힘든 액수일 뿐만 아니라 자칫 소비자들에게 우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줌으로써 낙농산업에 큰 타격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낙농육우협회는 즉각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조치에 대해 반박 성명을 발표하고 낙농가들의 힘을 모아 부당성을 입증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아울러 수많은 선진국에서도 낙농산업은 그 특수성 때문에 공정거래법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며 시장경제를 위시한 확실적 잣대로 법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예외규정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미국의 경우만 하더라도 낙농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우유수급안정과 거래약자인 농민보호를 위해 반독점법을 통해 협동조합은 독과점에서 예외시키는 조항 등이 명시하고 있는 만큼 낙농진흥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통한 생산자위원회 설치 및 협동조합 집유일원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번 공정위 조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행정개입에 관한 법규를 명확히 하는 제도정비에 본격 나서야하며 우유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원유가격 결정문제나 학교급식 고정가격제와 같은 정부개입을 좀 더 명확하게 법의 테두리 내로 끌어들이 방안이 마련되도록 주무부처인 농식품부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유업체에 과징금이 부과됨에 따라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가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등한 거래교섭과 원유수급안정을 위한 전국 단일 쿼터제와 생산자 기구 설치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이번 조치로 인해 우유 덤판매가 재개할 경우 낙농가들이 입는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낙농육우협회는 공정위가 이번 조치로 인해 낙농산업이 직간접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공정위에 대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며 국회 입법투쟁 등을 통해 대 낙농가 의견결집을 통해서 부당성을 알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유입계 이어 배합사료업계까지 탐입조사 논란

공정거래위원회가 유입계에 이어 배합사료 업체들의 가격담합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난 10월 25일부터 배합사료 생산량 1위~9위 업체까지 우선 조사를 마치고, 이후 보강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가격 담합 조사는 이제 시작한 셈으로 앞으로 언제 종결될 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배합사료업체는 정유나 밀가루, 설탕 업체와는 달리 업체수(44개)가 많기 때문에 가격 담합을 할 수 없는데다 시장점유율도 농협사료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 모두 10%를 밑돌고 있어 가격 담합의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내 배합사료업체 특성상 원료의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소비자가 축산농민인 관계로 더 더욱 가격 담합은 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이에 대해 일부 로펌에서도 사료업계의 실상을 살펴보니 가격 담합을 하기에는 구조상 쉽지 않은 것으로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협사료의 경우는 협동조합 정신에 맞게 협동조합법에 따라 가격정책을 펼쳐와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자체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축산업계에서는 사료가격을 내릴 요인이 발생하면 시장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업체마다 경쟁적으로 사료가격을 먼저 인하하려고 하는 반면 가격을 올릴 경우에는 최대한 억제하는 분위기가 이미 정착된 상황에서 가격 담합 의혹을 조사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며 경계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사료업계에서는 성실히 조사에 응하고 있다며 담담해하고 있다.

원유부족현상 기미

원유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준원유량 거래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농진흥회 기준원유량 인도 건수를 살펴보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간 활발하게 거래됐던 기준원유량이 지난해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올 하반기에는 평균 거래물량의 50%에도 못 미치는 한달 평균 5건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현상은 최근 농가 구조정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반추하는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규모화 할 농가들은 대부분 기준원유량을 구매하는데다 폐업할 농가들도 대부분 기준원유량을 판매했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원유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기준원유량에 대한 제한이 일시적으로 풀릴 것을 기대하는 농가들의 기대심리가 반영됐을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서울우유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최근 기준원유량 인수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기준원유량 거래가 줄면서 가격도 큰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낙농진흥회 기준원유량 거래가격은 지난해만 해도 0당 20만원대를 호가하던 것이 올해 들면서는 단 한번도 20만원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반기에 들면서는 하락세가 더욱 두드러져 12월 현재 0당 11만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5년 평균 최저가격으로 당분간 이 하락세는 지속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

